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취업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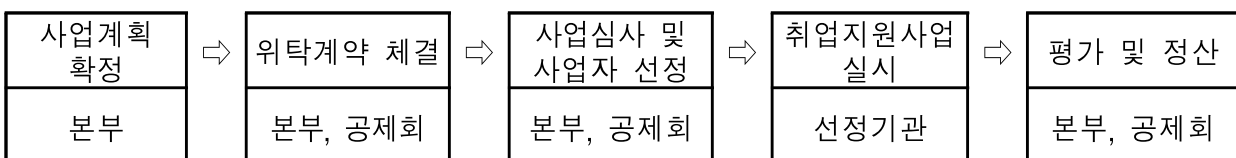
1 사업 주요 내용

- ☐ (사업 목적) 건설근로자에 대한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소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
- ☐ (사업내용)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취업을 지원
- ☐ (예산/재원) 3,400백만원('21년) /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3,400	3,400	3,400 (100.0%)	3,400	0	-

-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6조 및 제47조, 건설근로자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의3
- ☐ (지원대상) 건설업 입직 또는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
-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취업알선 강화방안으로 훈련기관과 취업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훈련생에 대한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제공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2020년 참여자는 총 19,676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1.5%, 취업지원 유형 전체 참여자의 1.9%
- (성별) 본 사업 참여자 중 남성은 90.0%(17,705명), 여성은 9.9%(1,953명)로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
- (연령별) 본 사업의 참여자 중 중년이 42.8%(8,421명)로 가장 많고, 장년 38.9%(7,659명), 청년 11.1%(2,183명), 고령 7.1%(1,398명) 순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공제회)	19,676 (100)	17,705 (90.0)	1,953 (9.9)	2,183 (11.1)	8,421 (42.8)	7,659 (38.9)	1,398 (7.1)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단위: %, 일)

	취업률 (180일 이내)	알선 취업률 (180일 이내)	고용 유지율 (180일 이상)	취업 소요기간	임금수준
고용서비스 전체	42.2	27.3	57.8	113.7	79.5
취업지원 전체	42.2	27.3	57.8	113.7	79.5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공제회)	16.7	3.0	45.3	159.0	108.6

주1: 고용보험 상용직을 대상으로 성과지표 산출

□ (만족도 조사)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고용서비스 전체	4.12	4.10	4.19	4.29	4.15	4.08	4.16	4.26	4.16	4.02
취업지원 전체	4.08	4.07	4.16	4.24	4.11	4.07	4.15	4.23	4.12	3.98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공제회)	3.89	3.87	3.96	4.02	3.88	3.81	4.06	4.01	3.93	3.79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됨
 - (범부처 중단기 계획) 동 사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4차(2020~2024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3.9)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확충 및 내실화(세부 이행과제 2-6)와 직접 관련되어 범부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노동시장 상황) 건설업 내국인 숙련공은 매년 3~4만명, 비숙련공은 5~6만명이 부족하며, 그 규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건설근로자들은 주로 인맥을 통한 기능습득과 취업알선이 관행화되어 공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으로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 (법적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고용보험법」 제25조에 의해 공공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명확
 - (사업목적) 노동이동도 높고, 근속연수도 짧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15년~)

- (예산증액 건의) '21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 확대 필요성에 따라 국회(환노위 및 예결위)에서 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의 훈련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훈련 수료생에 대한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21년 예산에 최종 반영되지는 못함
- (일자리 사업 운영성과) 동 사업은 건설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나, 일자리 정보 및 일자리 질에 대한 고용 여건 개선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취업지원 실적) 구인구직수요 및 근로자 분포를 고려하여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7개소(유료 직업소개소 시장의 약 1%미만)를 설치하고, 근로일수 실적 581,300일(직영 13.1%, 민간위탁 86.9%)로 목표근로일수(364,650일) 대비 59.4%를 초과 달성. 약 36억원 구직 수수료 절감 효과 (부처 제공 자료)
 - (일자리 정보 및 질 개선) 제공받은 일자리 정보나 제공받은 일자리의 질은 이용자 대상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운영의 적절성) 사업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운영실적은 꾸준히 증가함
 - 동 사업에서는 17개 취업지원센터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기관 평가를 실시함.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함
 -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종합만족도는 전년대비 0.2점 상승한 84.3점, 업무처리 절차 만족도는 전년대비 2.2점 상승 (해당부처 제출자료)
 - 취업지원센터는 공제회와 연계된 구인·구직 전산망을 운영 관리함. 취업지원전산망(건설일드림넷) 운영실적은 꾸준히 증가함. 주로 구직자,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부분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20년 건설일드림넷 이용(구직등록 온라인 13.5%, 오프라인 86.5%, 계 16,744명, 구인등록 온라인 9.7%, 오프라인 92.3%, 계 927명)

- (제도 개선 노력) 모니터링, 간담회, 워크숍 등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절차에 따라 개선 노력이 이루어짐. 다만, 사업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필요
 - 취업지원센터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자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업 평가결과는 차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운영
 - * 연초에 약정체결일까지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보전, 방문자 상담, 구인처 발굴 등 15시 이후 처리 업무가 많아 취업지원센터 운영시간 합리화
 - 취업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취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업무개선 의견을 수렴함
 - * '20년 사업추진 관련 논의를 위한 센터장 간담회 연간 2회,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매월 직영센터장 간담회, 기타 '21년 사업 개선방안 의견 조치 및 홍보 추진 의견조사 3회 실시

4 개선권고

□ 평가 결과 : 개선필요

-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수행기관의 적극적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
 - 신규기능인력 유입을 위해 임금·복지수준·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 정부에서는 기능등급제 도입('21.5.27. 시행),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임
-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유지를 높일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의 훈련기관과의 직무교육, 기술훈련과 연계 노력 필요